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

박 형 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13

북한은 오는 4월 중순 ‘강성대국 대문열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말에 선언되었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은 2009년 초부터였다. 표면적으로 ‘강성대국 대문열기’ 프로젝트는 ‘경제 및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축으로 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강성대국 대문열기’ 프로젝트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전자는 후자의 일 구성요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대문열기와 관련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정책적 주요 조치들에 대해 설명한다.

2007년과 정국 변화

2000년대 후반으로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내부 권력 변동, 대내외 정책 방향, 그리고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변화 또는 진행되었다. 때때로 정치적 정책적 변화가 밀집해서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다. 여기서 두 개의 시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 첫째 시점은 2007년, 둘째 시점은 2008년 말~2009년 초이다.

우선 2007년을 보자. 먼저 4월에 두 가지 주요 인사조치가 있었다. 그 동안 개혁정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하던 박봉주 총리가 실각했다. 이는 그간 박봉주 노선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던 세력이 패퇴했음을 의

미했다. 동시에, 1995년 시작된 ‘선군정치’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영춘 총참모장은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실권적 지위에서 명목상의 지위로 보직 이동했다. 이와 같은 인사 조치와 함께 정책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5월부터 그 동안의 개혁 ‘여독’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매우 강력한 비사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어서 2008년 초에는 군부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있었다. 아울러 2007~2008년 그 동안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주요 인물들이 숙청되었다. 이러한 숙청은 상층정치 변동의 하위 파장으로서 대남 경협으로부터의 수익을 누가 관리하는가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북측 내부에서 대내 및 대남 정책 주도권이 명확하게 변화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원래 8월에 계획되었으나, 10월에 개최되었다. 10월 장성택이 행정부장으로 승진됐고, 동시에 시장억압정책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의 2007년 어느 시점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12월 1일 개최된 지식인 대화는 ‘2012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연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종합하면, 2007년의 권력 및 정책 변동, 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후계자 내정 및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프로젝트는 서로 연계되어 거의 동시에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국구상은 2008년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라는 중요 환경 변화로 지속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 정국 변화

다음으로 2008년 말~2009년 초를 보자. 이 시기에도 내부 권력 변동, 대내외 정책 변동,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8월의 뇌경색에서 회복하여 일선에 복귀했던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김정일은 새로운 국정구상 및 권력진용편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의 구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포괄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아울러 2월과 4월 사이에 1995년 이래 ‘선군정치’의 주도 세력인 구군부의 위세가 약화되고, 이영호, 김영철 등 신군부가 부상하는 조직 개편, 인사이동 및 헌법개정이 있었다. 나아가 대내외 정책에도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2009년 초부터 ‘핵 보유 국가’론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서 대외정책 입장을 현저히 강화시켰고, 4월과 5월 미사일 및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의 핵관련 대외정책 입장을 눈에 띄게 변경시키는 것으로써 신군부의 강화된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내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정책을 시작했다. 2009년 초 2012년까지 달성해야 할 경제목표치가 제시되었고, 2009년 대내경제정책이 한층 강경해져, 150일 전투 및 화폐 개혁 등이 시행되었다. 2009년부터 김정일은 2011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중화학공업부문의 핵심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분야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현지지도를 했다. ‘강성대국 대문열기’의 간판사업인 평양 10만호 살림집 건설 공사도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와 김정은 후계 구축의 동시 진행

2009, 2010, 2011년의 정책 상황을 돌이켜 평가할 때 2008년 말 김정일이 입안하여 2012년 4월 15

일을 목표 기한으로 하는 추진했던 정국 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 핵심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다. 이는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개최를 통해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등장시킨 것, 그리고 2011년 10월 8일 이후 김정은에게 국정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을 통해 진행되었다.

둘째, 정국 주도 세력의 교체이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김정일이 정국관리를 위임해 왔던 구군부 인물 및 (이제강 등) 민간당료 세력을 퇴진시키고, 신군부 및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신진 민간당료를 부상시켰다.

셋째, 대외 대남 정책의 강경화이다. 대외적으로 핵 보유 국가 승인을 관철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과시했고, 동시에 협상 유도를 위한 회유적 제안을 시행하는 한편,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정세주도권 재탈환을 위해 협박과 회유, 그리고 노골적 공격 조치를 활용했다.

넷째, 국영경제의 강화와 시장 및 사경제의 약화이다. 구체적으로 중화학공업 분야 국영기간기업을 정상화하고 국영 경공업을 진흥하여 국내경제에서 국영부문의 공급과 고용의 우위를 재정립 하려고 했다. 이것이 성공하면 시장활동에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주더라도 국가경제가 지탱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주민의 생계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개혁 거부이다. 경제개혁 조치 미실시와 노력동원 강화를 경제운영의 핵심으로 하면서, 과학기술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전자의 대표적 슬로건이 ‘대고조’였다. 이 단어는 2009년 이래 경제사업에서 핵심단어가 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2009, 2010, 2011년 “CNC,” “침단돌파전,” “지식경제 강국,” “새 세기 산업 혁명”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 내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여섯째, 이와 같은 여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의 확립이다. 이러한 비용은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증가, 초고도 인플레이를 통한 대내경제 수탈, 외화사용 금지 정책 등을 통한 국내 외화 수탈, 외화 및 식량 수입 의무를 기관 및 대외일꾼에 강제 할당, 생활필수품 수입 관련 권한 배분 및 가격 조작을 통한 폭리정책 등을 통해 조달되었다.

일곱째, 대내 억압 능력과 조치의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인민보안부 강화, 비사검열의 강화, 국경통제 강화, 탈북에 대한 징벌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여덟째,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 견제정책이다. 중국으로부터 후계정권에 대한 정치적 용인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핵 외교 과정에서 기회가 발생할 때 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절상시킬 용의가 있음을 표하면서, 중국견제를 위해 미국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상에서 2007년과 2008/2009에 권력진용편제, 대내외 정책 방향, 후계체제 구축에 관한 주요 결정

이 내려졌음을 보았다. 특히 2009년 초 김정은 후계체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됨과 함께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구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의 ‘2012년 강성대국 대문열기’ 사업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대내외 환경 정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마감날짜는 2012년 4월 15일이었다. 따라서 그 기획자이자 감독이었던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지만, 일단 기존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주도권은 이제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과 관련 세력으로 이양되었다.

맺는 말

2012년 4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 등은 2009년 이래의 김정일 정국 구상을 총결산하면서, 미래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초석을 놓는 행사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생존 시에 이미 4월 15일 이후에 대한 구상을 염두에 두면서 행마를 두기 시작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2011년 10월 초에 정국 주도권을 김정은에게 넘긴 것이다. 둘째, 12월 사망 직전 미국과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승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그 정국 구상을 만들어내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김정은과 관련 세력에게 이양되었다. 4월 15일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권력 구조 변동이다. 여기에는 주요 인물 및 주요 기관이 전체 권력 구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특히 김정일이 추진해오던 권력구도 재편 프로젝트가 김정일 사후에도 유효한지가 주목거리이다. 둘째, 정책적으로 보면, 대내외 정책 변화 여부이다. 기존 여러 정책의 방향조절과 우선순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 주목 사항이다. 예를 들어 4월 12일-16일에 예정되어 있는 ‘광명성 3호’ 발사가 원래 김정일의 시나리오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정책 갈등 속에서 사후에 첨가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권력 구도 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 방향 설정에서도 이권배분을 놓고 내부 여러 세력 간에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4월 중순의 여러 행사는 정책 변경 보다는 권력 및 정치구조의 재편 측면에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중앙당 여러 기구가 정비된 것을 바탕으로 오는 4월 당대표자회에서도 중앙당 기관의 정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것이 과거 당기관이 위세를 날리던 1970~80년대로의 단순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당 기관이 보다 정상화된다고 해도, 변화된 환경 때문에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관련 세력의 내구성의 핵심은 바로 이 새로운 정치체제가 북한 내부 정치의 여러 난제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순기능적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